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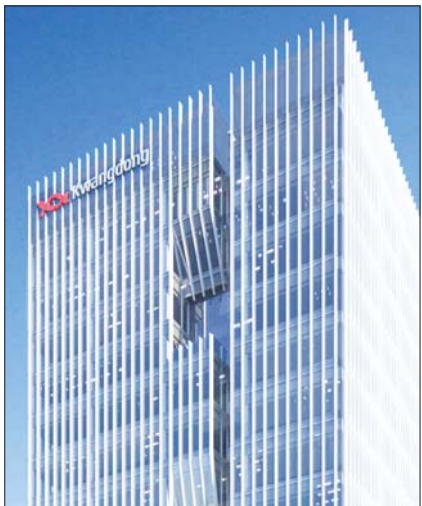
광동제약, 부당 내부거래 ‘무혐의’ 경영활동 ‘사법리스크’ 해소 국면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사건 종결
대법원 ‘NIP 백신 입찰담합’ 무죄
업계 “대내외 불확실성 줄어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진행해 온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조사 착수 후 약 2년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와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제재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당국은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들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오투기와 광동제약. 감독당국은 언론을 통해 조사 착수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



광동과천타워

/광동제약

에 돌입했고, 약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단속에 나섰다.

당시 한기정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

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광동제약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구조와 정당성 여부, 가격 산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는 광동제약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담합 혐의 형사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웠고, ‘둘러리업체’ 참여 역시 절차적 요인 등에 따른 것이었다는 2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광동제약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이 종결됨에 따라 그간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천공항공사, 지난해 역대 최대 운송실적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일본 노선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2025년 여객실적 7407만 1475명, 운항실적 42만 5760회를 기록해 지난 2001년 개항이후 역대 최대 항공운송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

종료 전 매매는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재연장 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받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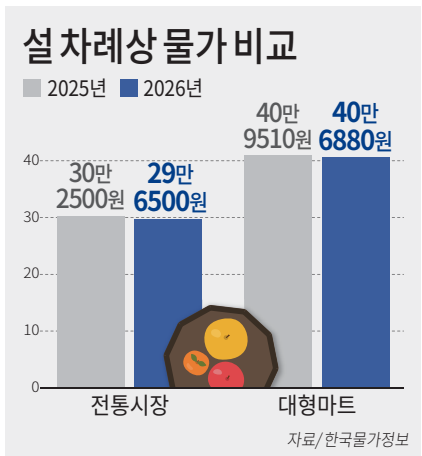
4인 가구 차례상 비용 29.6만원~40.6만원

과일·채소 등 전년대비 물가 하락
수산물·가공식품 중심 가격 상승

매년 명절마다 최고치를 경신해오던 설 차례상 물가가 올해는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품목별로는 가격 흐름이 엇갈리며 체감 부담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9만6000원, 대형마트는 약 4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최근 수년간 명절마다 차례상 비용이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견과류와 채소류가 전체 비용 하락을 이끌었다. 지난해 차례상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과



일류는 올해 출하 여건이 개선되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표 품목인 배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3% 내려갔고, 대추 역시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늘며 약 25% 하락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도 김장 이후 공급이 안정되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약 15%가량 가격이 내렸다.

반면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기타 품목은 가격 부담이 이어졌다. 조기와 동태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수입 원

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어획량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로 이어지면서 떡 등 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보험세를 유지했다. 다만 갈비나 등심 등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높은 품목의 경우, 사료비와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한파가 이어질 경우 기온에 민감한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정위, KT ‘전상법 위반’ 과태료 부과

S25 시리즈 사전예약 기만적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한된 물량을 숨긴 채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

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소비자 모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

나 1월 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당일 0시 이후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납부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사전예약·이벤트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李,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靑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지명 한 달여 만에 낙마했다.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

와 함께 대통령의 결심으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령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탕평 인사’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바로 발탁한 상징적인 인사에 지명 철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야당의, 다른 정당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 온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관 취임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이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한 것이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